2021년 국회직 9급 행정학 (2021.8.14.)

• 해설 : 이승철

1 정책의 시행과 결과 간 인과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위협요인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성숙요인 ② 역사요인 ③ 선발요인 ④ 상실요인 ⑤ 회귀요인

해설

모두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으로서 외재적 요인인 선발요인 외에는 나머지는 내재적 요인이므로 ③을 답으로 볼 수 있으나 확정답안은 ②번으로 처리되었다. 출제자는 실험상황에서 처리와 실험대상자 특성의 연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성숙·선발·상실·회귀요인을 들고 처리 외의 요인인 사건(역사)요인으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성 저해요인 유형분류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부적절한 문제이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처리(추정된 원인)와 결과 간 다른 경쟁가설·제3의 변수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 **외재적 요인** : 실험 상황 밖에서 실험의 처리와 전혀 무관하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개인들을 할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요인으로 선발요인이 이에 해당.
- **내재적 요인** : 실험적 처리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처리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 측정도구에 일어나는 변화, 또는 연구 그 자체에 대한 반작용 효과 등.

표본의 무작위배정 및 대표성 관련요인	선발(선정)요인	외재적 요인
	상실(탈락)요인, 회귀인공요인(실험직전반응효과)	내재적 요인
대상집단의 특성 변화	성숙(성장)요인, 사건(역사)요인	
관찰 및 측정 관련요인	측정수단(측정도구)요인, 측정(검사·조사·시험)요인	
비교집단 간의 상호작용	오염·확산(누수, 모방, 부자연스런 반응)	
복합요인 - 단일 요인들의 상호작용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선정과 성숙의 상호작용, 선정과 사건의 상호작용	내재적 요인 + 외재적 요인

답 ②(정답 논란 있음)

[관련기출]

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 외재적 요인은? 2014 지방9급

① 선발요인 ② 역사요인 ③ 측정요인 ④ 도구요인

2.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적 요소가 아닌 것은? 2009 지방9급

① 역사적 요소 ② 성숙효과 ③ 선발요소 ④ 측정요소

답 1. ① 2. ③

2 다음 내용의 리플리와 프랭클린(R. B. Ripley & G. A. Franklin)의 정책 유형과 정책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권리나 이익, 서비스를 사회의 특정 부분에 배분하는 정책
㉡ 다수 경쟁자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특정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 일반 대중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정책

	㉠	㉡	㉢	㉣
①	노령연금제도	항공노선허가	최저임금제	개발제한구역
②	사회간접자본	개발제한구역	최저임금제	방송국인가
③	노령연금제도	개발제한구역	누진소득세	방송국인가
④	사회간접자본	항공노선허가	누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⑤	노령연금제도	방송국인가	최저임금제	누진소득세

해설

㉠ 배분정책	㉡ 경쟁적 규제정책	㉢ 재분배정책	㉣ 보호적 규제정책
사회간접자본	항공노선허가, 방송국인가	누진소득세, 노령연금제도	개발제한구역, 최저임금제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유형과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4 국가7급

㉠ 추출정책 – 부실기업 구조조정 ㉡ 상징정책 – 노령연금제도 ㉢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 구성정책 – 정부조직 개편 ㉤ 분배정책 – 신공항 건설 ㉥ 재분배정책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 다음 중 연결이 타당하지 못한 것은? 2006 서울7급

① 간접규제정책 – 조세의 감면 ② 재분배정책 - 누진세제도 ③ 보호적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실시
④ 경쟁적규제정책 - 방송국설립인가 ⑤ 직접규제정책 –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부과

3. 정책의 유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교육행정9급

①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상징정책에 속한다.
②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재분배정책에 속한다.
③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갈등이 더 심하다.
④ 밀어주기(log rolling), 나눠먹기(pork barrel)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4. 정책유형별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020 군무원9급

① 구성정책 : 국경일의 제정, 정부기관 개편 ②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제한
③ 추출정책 : 조세, 병역 ④ 분배정책 :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5. 다음 중 정책과 정책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019 경찰간부

㉠ 최저임금제
㉡ 항공노선 배정
㉢ 신공항건설
㉣ 실업수당

	㉠	㉡	㉢	㉣
①	경쟁적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②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분배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④	보호적 규제정책	분배정책	구성정책	재분배정책

6. 다음 중 정책 유형과 사례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2017 경정승진

㉠ 추출정책 - 정부기관 신설 ㉡ 구성정책 - 성금 모금 ㉢ 상징정책 - 궁궐 복원
㉣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도 ㉤ 분배정책 - 택지분양 ㉥ 재분배정책 - 주택자금 대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답 1. ④ 2. ⑤ 3. ② 4. ① 5. ③ 6. ④

3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②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시보로 임용할 수 있으며, 시보기간 동안 정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위와 신분이 보장된다.
④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이하 법률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규정
① (○)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
② (○) **제26조의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① 임용권자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하여 학업 성적 등이 뛰어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추천·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6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정규공무원에 적용되는 신분보장(68조), 직권면직규정(7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법령위반으로 공무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와 제70조(직권면직)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④ (○) **제28조의2(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상호 간에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하려는 때에는 시험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 자격 요건 또는 승진소요최저연수·시험과목이 같을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답 ③

[관련기출]

1. 시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3 국가9급
   ① 초임자의 적응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로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②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고위 관리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을 받는다.
2. 우리나라 공무원의 시보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행정사(수정)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보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시보기간은 시보공무원에게 행정실무의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시보임용은 공무원으로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발과정의 일부이다.
   ⑤ 시보공무원은 일종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신분을 보장한다.
3. 우리나라 시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 군무원7급
   ① 시보기간이 종료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② 시보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보기간 동안에도 직위를 맡을 수 있다.
   ③ 시보기간 중에 직권면직이 되면, 향후 3년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④ 시보기간 동안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력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행정사
   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③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⑤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답 1. ④ 2. ⑤ 3. ② 4. ②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비하여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②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말한다.
③ 국고보조금은 사용의 용도나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중앙부처가 지정한 용도와 조건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④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지출의 용도가 자유로운 일반보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재량권이 상당히 보장된다.
⑤ 국고보조금의 구체적인 세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다.

해설

① (△) 정확하게는 일반회계 세입에 대비하여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인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통령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text{• 재정자주도} = \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지방교부세} + \text{조정교부금}}{\text{일반회계예산}} \times 100$$

재정자주도는 총재원 중 일반재원 비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나타낸다.

②③④ (○)

• **의존재원**

국가에 의존	지방 교부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경우 지급	경상재원	일반재원
		부동산교부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		
		소방안전교부세	자치사무인 소방업무와 관련한 지방예산 부족을 보전		특정재원
		특별교부세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지급	임시재원	
	국고 보조금	협의의 보조금	자치사무. 장려적 보조금(국가가 부담의무는 없지만 지급)	경상재원	특정재원
		(국고)부담금	단체위임사무. 정률보조(이해관계 범위만큼 부담)		
		교부금	기관위임사무. 정액보조(국가사무이므로 전액 보조)		
상급자치단체에 의존	시·군 조정교부금		도 ⇨ 관할 시·군 / 광역시 ⇨ 관할 군	경상재원	일반재원 특정재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광역시 ⇨ 관할 자치구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다. 지방교부세 중에는 특정재원(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도 있지만 대부분(보통교부세)이 일반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를 지출용도가 자유로운 일반재원으로 봄.

- 지방재정조정
  - 국가(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시·군 조정교부금
      - 광역시 ⇨ 군
      - 도 ⇨ 시·군
    - 자치구 조정교부금
      - 특별시·광역시 ⇨ 자치구

⑤ (×) 국고보조금은 구체적 세출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소관 중앙관서장의 교부 여부 결정과 예산안 반영, 국회의 보조금 예산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교부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

국고보조금 운용체계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보조사업 수행		보조금 정산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관서 장에게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	• **중앙관서장**는 보조금 교부여부 결정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 **국회**는 보조금 예산안 심의·확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교부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 합계가 확정된 보조금 금액 초과시, 이를 반납

답 ⑤

[관련기출]

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 국가7급

① 지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보다 재산거래에 대한 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②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지방세 수입, 지방세 외 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③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세입에서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재원의 비중으로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차등보조율을 설계할 때 사용된다.
④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 사용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국고보조금과 특정한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로 구분한다.

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지방7급

① 지방교부세법 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
②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조정교부금은 전국적 최소한 동일 행정서비스 수준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다.
④ 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답 1. ① 2. ①

5 다음 공공기관 가운데 그 유형이 다른 하나는?

① 예금보험공사 ② 한국지역난방공사 ③ 한국자산관리공사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⑤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설

② 지역난방공사는 시장형 공기업, ①③④⑤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현황(2022.6. 현재 350개)

공기업 (36개)	시장형 (1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
	준시장형 (21개)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주식회사 에스알
준정부 기관 (94개)	기금관리형 (13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근로복지공단
	위탁 집행형 (81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독립기념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장학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아시아문화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타 공공기관 (220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방과학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특허정보원, 서울대학교병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한국장기기증조직원, 예술의 전당, 국악방송,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등

시장형 공기업	공항	항만(부산·인천)	난방 ← 전력, 석유·가스 ↖ 발전·수력원자력	강원랜드		
준시장형 공기업	철도 (주)SR(수서고속철도) 도로	항만(여수·울산)	수자원, 석탄 광해광업, 가스기술, 전력기술, 한전K…	LH, 주택도시보증	조폐 감정	방송광고·해양환경·제주·馬事會, 그랜드코리아레저

답 ②

[관련기출]

1.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유형과 그 사례가 잘못 연결된 것은? 2011 지방9급

① 시장형 공기업－한국마사회 ② 준시장형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농어촌공사 ④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민연금공단

2.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것은? 2011 울산전환특채

① 인천공항공사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③ 한국전력공사 ④ 부산항만공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14 서울9급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4. 공공서비스 공급주체 중 준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2012 서울 전환특채

① 우정사업본부 ② 예금보험공사 ③ 외교통상부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⑤ 한국마사회

5. 다음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 2007 경북9급(2)

① 책임운영기관 ② 한국도로공사 ③ 한국가스공사 ④ 한국조폐공사

6. 다음 제시된 공기업 중 분류상 특징이 다른 하나는? 2012 서울7급(수정)

① 한국철도공사 ② 한국가스공사 ③ 한국공항공사 ④ 한국석유공사 ⑤ 한국전력공사

답 1. ① 2. ② 3. ② 4. ⑤ 5. ③ 6. ①

6 <보기>의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 사항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예산은 가능한 한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단일의 예산 내에서 정리되어야 한다.
㉡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
㉢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	㉡	㉢
①	추가경정예산	전대차관	이용과 전용
②	특별회계	예비비	준예산
③	추가경정예산	이용과 전용	계속비
④	특별회계	계속비	수입대체경비
⑤	추가경정예산	순계예산	특수활동비

해설

예산원칙	㉠ 단일성 원칙	㉡ 완전성 원칙(예산총계주의)	㉢ 한정성 원칙
예외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전대차관, 순계예산, (초과수입을 관련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는) 수입대체경비	이용과 전용, 예비비, 계속비

* 준예산은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특수활동비는 공개성 원칙의 예외

답 ①

[관련기출]

1. 전통적 예산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2 해경간부

○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수입, 현물출자와 외국차관을 정부 이름으로 대신 빌려서 실제 그 돈을 사용할 차관사업 수행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전대차관은 (㉠)의 예외이다.
○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특별회계, 기금은 (㉡)의 예외이다.
○ 준예산, 전용, 사고이월, 재정상의 긴급명령, 선결처분은 (㉢)의 예외이다.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예산의 이월, 계속비 등은 (㉣)의 예외이다.

	㉠	㉡	㉢	㉣
①	예산총계주의	단일성 원칙	공개성 원칙	한계성 원칙
②	초과지출금지 원칙	통일성 원칙	공개성 원칙	단일성 원칙
③	예산총계주의	통일성 원칙	사전의결 원칙	한계성 원칙
④	초과지출금지 원칙	단일성 원칙	사전의결 원칙	한계성 원칙

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전통적 예산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17 경찰승진

• 특별회계, 수입대체경비, 기금은 (㉠)의 예외이다.
• 계속비, 예비비, 이월은 (㉡)의 예외이다.
• 순계예산, 현물출자, 전대차관(轉貸借款)은 (㉢)의 예외이다.
• 사고이월, 준예산, 전용은 (㉣)의 예외이다.

① ㉠ 통일성 원칙, ㉡ 한계성 원칙, ㉢ 완전성 원칙, ㉣ 사전의결 원칙
② ㉠ 단일성 원칙, ㉡ 한계성 원칙, ㉢ 정확성 원칙, ㉣ 공개성 원칙
③ ㉠ 통일성 원칙, ㉡ 명확성 원칙, ㉢ 완전성 원칙, ㉣ 공개성 원칙
④ ㉠ 단일성 원칙, ㉡ 명확성 원칙, ㉢ 정확성 원칙, ㉣ 사전의결 원칙

3. 예산의 원칙과 그 내용, 예외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9급(하)
①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 – 준예산
② 통일성의 원칙 –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의 연계 금지 – 특별회계
③ 단일성의 원칙 – 세입과 세출 내역의 명시적 나열–이용과 전용
④ 완전성의 원칙 – 예산총계주의 – 전대차관

4. 예산 원칙과 그 예외의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2015 경찰간부
① 예산단일성의 원칙–일반회계, 특별회계
② 예산완전성의 원칙–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③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준예산, 이용, 전용
④ 예산의 질적 한정성의 원칙–이용, 계속비, 전용

5. 다음 중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연결로 가장 옳은 것은? '2015 경찰간부
① 예산완전성의 원칙 - 수입대체경비, 현물출자, 전대차관
② 예산단일성의 원칙 - 일반회계, 특별회계
③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이용, 전용
④ 예산의 질적 한정성의 원칙 - 이용, 계속비, 전용

6. 예산의 원칙과 예외사항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2018 국회9급
① 명확성(명료성) 원칙 - 준예산
② 통일성 원칙 - 총액계상
③ 한계성(한정성) 원칙 - 이용과 전용
④ 단일성 원칙 - 예비비
⑤ 완전성 원칙 - 추가경정예산

답 1. ③ 2. ① 3. ③ 4. ② 5. ① 6. ③

7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에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사이먼(H. Simon)은 '행정행태론'에서 정치적 요인과 가치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내 개인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③ 애플비(P. Appleby)는 '거대한 민주주의'에서 현실의 행정과 정치간 관계는 연속적, 순환적, 정합적이기에 실제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④ 굿노우(F. Goodnow)는 '정치와 행정'에서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정치이며, 이를 실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규정하였다.
⑤ 왈도(D. Waldo)는 '행정국가론'에서 사기업 영역의 관리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① (×) W. Wilson은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행정과 정치의 차이점을 강조.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 확립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행정 이원론 주창. 민주적 정치체제와 비민주적 행정이 결합 가능한 것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될 수 있고, 또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여 정치의 영역과 구분. 즉 행정을 관리와 경영의 영역(a field of business), 그리고 전문적·기술적 영역으로 규정. 따라서 행정학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무엇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일을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라고 규정. 정치와 행정의 분리 필요성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행정학 연구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독립하여 분과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데 공헌.
② (×) 논리실증주의자인 H. Simon은 「행정행태론」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원칙을 발견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의 도입을 강조. 사실(fact)과 가치(values)를 구분하여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은 사실만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
③ (×) P. Appleby는 「정책과 행정」, 「정부는 다르다」, 「거대한 민주주의」 등에서 현실의 행정과 정치간 관계는 연속적·순환적·정합적이어서 실제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
④ (○) F. Goodnow는 유럽의 관방학과 행정법, 그리고 독일의 관료제를 연구하여 역사학과 공법학, 정치경제학 강의를 통해 행정학을 소개하면서 미국 행정학 초석을 다짐. 비교행정법의 시각에서 서술된 '정치와 행정(Politics and Administration, 1900)'의 저서를 통해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으로 양자를 구별. Goodnow는 행정에 대한 지나친 정당정치의 개입이 정책의 능률적인 집행을 저해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행정이 정쟁(政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을 체계화.
⑤ (×) 사기업 영역의 관리이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경우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공사행정1원론적 시각이며, D. Waldo는 정치·행정1원론, 공사행정2원론적 시각이다. D. Waldo는 '행정국가론(1948)'에서 행정이 가치중립적이라는 기존의 시각을 반박하고, 민주주의의 강화라는 목적을 지닌 능동적·가치지향적 관점으로 행정을 재정의.

답 ④

[관련기출]

1. 다음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경찰간부후보
① 굿노(F.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윌슨(W. Wilson)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③ 사이먼(H. Simon)은 고전적 조직원리들을 검증되지 않은 속담이나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④ 테일러(F.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2. 행정학과 관련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6 서울7급
① 굿노(F. J. Goodnow)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작용이라고 주장했다.
② 테일러(F. W. Taylor)는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추구하였다.
③ 사이먼(H. A. Simon)은 행정 원리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강조하였다.
④ 귤릭(L. H. Gulick)은 POSDCoRB를 통해 능률적인 관리 활동방법을 제시하였다.

3.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라는 논문에서 정치와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② 윌슨은 행정의 영역을 전문적(專門的) 기술적(技術的) 영역으로 인식한다.
③ 굿노우(F. Goodnow)도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④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정당정치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답 1. ① 2. ③ 3. ④

8 정책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편익분석에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비용편익분석 대상이 되는 대안들을 비교하기 위해 순현재가치법, 비용편익비율법, 내부수익률법 등이 사용된다.
③ 델파이(delphi) 기법은 전문가들이 상호 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서면으로 여러 차례 상호 피드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다.
④ 정책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전문가 외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기법이다.
⑤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일 경우, 이를 계층화하여 세부요인들로 분해한 후 각 요인들을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해설

① (○) 할인율 결정기준에는 민간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 및 공공할인율이 있다. 민간할인율은 민간의 이자율을 근거로 하는 할인율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도를 나타내지만,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s)이란 어떤 미래시점에서 실현되는 편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전체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고려하는 집단적 가치부여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를 단순히 합친 것과는 다르다. 편익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공공사업의 경우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진다. 민간이자율(시장이자율)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적용시 편익을 과소평가하여 필요한 사업을 투자가치가 없다고 평가해 사업을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에 주로 사용된다. 공공사업은 미래세대의 복지에 기여하고 외부효과를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민간이자율보다 낮게 설정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일반델파이는 익명이 엄격히 보장(철저한 익명성)되어 분리된 개인으로서 답변하고, 의견 제시는 대면적 토의가 아닌 서면으로 제시하며 반복적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 조정·합의를 통해 종국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일치를 유도한다. 반면 정책델파이는 초기에는 익명으로 의견를 제시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주장들이 표면화된 후에는 참가자 간 공개토론도 허용된다. 또한 참가자 선발시 전문성 자체보다는 흥미와 식견에 바탕을 두며, 참여범위가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정책관련자까지 포함하여 넓어진다.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의 구별

구 분	전통적 델파이(일반델파이 conventional delphi)	정책델파이(policy delphi)
적용영역	일반문제(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예측	정책문제에 대한 예측
익명성	철저한 익명성	선택적 익명성(중간에 상호교차토론 허용)
통계처리	통계처리를 통한 의견의 평균치·중위(衆位)값 발견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
합 의	전문가 간 합의(근접된 의견)의 도출	구성[조성]된 갈등-극단적·대립적 견해의 유도와 존중
응답자	동질적 정책전문가를 응답자로 선정	정책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정책관련자 등 다양한 응답자 선정
토 론	없음	컴퓨터를 통한 회의방식, 대면토론도 활용
유사점	주관적 예측기법, 다수의 응답자 선정, 반복과 통제된 환류, 의견의 통계 처리	

⑤ (○) **•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① 대운하, 새로운 공항, 지하철,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별에 비용편익분석과 더불어 가장 많이 쓰이는 분석기법. **1970년대 초 새티(T. Saaty)가 개발**한 이래 의사결정대안 평가나 미래예측기법으로 사용.
②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정부사업의 예비적 타당성 조사에 다기준분석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활용.
③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보고 여러 개의 계층으로 분해한 다음 각 계층별로 복수의 평가기준(구성요소)이나 대안들을 설정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 계층의 요소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을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나 중요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각 대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선택하는 기법.
④ **정량적**(定量的) **요소와 정성적**(定性的) **요소,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의 통합** : 정량적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 분야에 전문가의 정성적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 요소의 가중치나 중요도를 구하는 데 유용한 점에서 수리적 기법만 활용한 분석방법 보다 강점을 지님.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치 산정절차, 민감도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이 평가됨.
⑤ 의사결정요소의 속성과 그 측정척도가 다양한 **다기준(多基準) 의사결정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의사결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순위화 시키고, 그 가중치를 비율척도화 하여 정량적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⑥ **단계** : 3단계. 문제를 계층으로 **분해**(decomposition) ⇨ **비교판단**(comparative judgment) ⇨ **우선순위결정**(comparative priorities)
㉠ **1단계-문제 설정 및 계층적 구조화** : 문제를 몇 개의 계층 또는 네트워크 형태로 나누되(**분해의 원리**), 각 계층에는 동일한 성질의 요소들이 나열되어야 함(**동일성의 원리**).
㉡ **2단계-문제별 쌍대비교[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 : 각 계층에 포함된 하위목표나 평가기준으로 표현되는 구성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상위계층의 어느 한 목표나 평가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이원비교(쌍대비교)를 실시하여 상대적 중요도 결정. 상대적인 중요도를 평가하는 동일 수준의 요인들은 특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 함(독립성). ⇨ **차별화와 비교판단(쌍대비교)의 원리**(관찰 가능한 요소 간 관계를 설정하고 그 강도를 차별화할 수 있고 요소들은 비교가 가능해야 함)
㉢ **3단계-우선순위 설정** : 각 계층에 있는 요소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안 간 우선순위를 설정(**종합의 원리**).

답 ④

[관련기출]

1. 정책 델파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지방9급
   ①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②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법이다.
   ③ 대립되는 정책대안이나 결과가 표면화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정책문제의 성격이나 원인, 결과 등에 대해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이 참여한다.
2.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2 경찰간부
   ① 처음에는 익명성이 요구되나 정책안에 대한 논쟁이 표면화되고 나면 참여자들은 공공연한 입장에서 토론이 허용된다.
   ②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한다.
   ④ 정책델파이는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으나 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며, 주관적이고 질적인 예측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류과정을 전개한다.
3. 정책예측기법 중 하나인 전통적 델파이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 경정승진
   ① 참여하는 모든 전문가나 지식인들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② 의견차이나 갈등을 부각시키는 양극화된 통계처리를 한다.
   ③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활용한다.
   ④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응답결과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곤란하다.
4. 정책델파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 경정승진
   ① 정책델파이는 주관적이고 질적인 예측 방법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의견교류 과정을 전개한다.
   ② 일반적인 델파이와 달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의견이 합의에 이를 수도 있으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③ 정책델파이는 불일치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의견들보다는 의견의 중위값(medium)을 통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전통적 델파이 기법의 약점을 보완한다.
   ④ 참여자의 선발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해 관심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도 고려하며, 흥미와 통찰력을 가지고 의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대표하는 주창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분석 방법은? 2020 서울9급

   • 대안 간의 쌍대 비교를 한다.
   • 사티(Saaty)가 제시한 원리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한다.
   •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브레인스토밍 ② 델파이 ③ 회귀분석 ④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6. 다음이 설명하는 정책분석방법은? 2011 국가7급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를 더 작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이 요소들을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일련의 비교판단을 통해, 각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인 강도와 효용성을 나타내는 방법 이다.

   ①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② 교차충격매트릭스방법(cross impactmatrix)
   ③ 정책델파이방법(policy delphi method) ④ 외삽법(extrapolation)

답 1. ③ 2. ③ 3. ② 4. ③ 5. ④ 6. ①

9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행정사무 감사 ② 주민투표 청구 ③ 통할대표
④ 의안 발의 ⑤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

해설

③ (×)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단, 교육·학예사무 통할권은 교육감).
• **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주민의 대표기관** :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답 ③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지방자치법 47조 1항 – 의결사항 범위는 열거주의) ①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금의 설치·운용**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⑧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 감시권

①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구 분	대 상	시기·요건	대상기관	주 체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 전반	**매년 1회 정기적(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 (광역 14일, 기초 9일 범위)**	상임위원회 소관의 전체 기관	본회의, 위원회(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특정 사안 (구체적·한정적)	**재적의원 1/3 이상 찬성**으로 발의, 본회의 의결로 조사. 실시 시기 제한 없음	특정 사안 관련기관	

② **자치단체장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음).

③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출석·답변 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질문에 답변해야 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음.

④ **의견표시권** : 자치단체 폐치·분합이나 명칭·구역 변경(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제외)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의견서가 제출되면 자치단체는 수리 의무가 있지만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자율권

① **내부조직권** :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조례로 설치), 위원회 위원 선임, 사무조직의 설치.

② **의사(議事)자율권** : 의회규칙 제정권, 개회·폐회·휴회 결정, 회의의 공개 금지 결정.

③ **의회경찰권** :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

④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의장·부의장 선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시·군·자치구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 임기는 2년. 의장·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루 직무수행 불가시 임시의장을 선출해 직무 대행.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 가능. 불신임 의결시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됨. ☑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그 직무가 정지된다.(x) - 의장·부의장 직에서 해임
의원의 사직허가		지방의회는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음(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 가능)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장에게 자격심사 청구 가능. 심사 대상인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음.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의원에 대한 징계	징계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가능
	징계 종류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단, 제명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필요)

[관련기출]

1. 다음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회8급

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실시 청구권 ② 지방의회 외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③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④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⑤ 소속의원의 사직허가

2.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① 예산의 심의·확정권과 결산의 승인권을 모두 가지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을 모두 가지는 지방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④ 지방자치단체 전체 주민보다 선출된 선거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기능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2008 국회8급

① 정책의 심의 및 결정 ② 예산안 의결 ③ 집행부 견제 및 감시 ④ 조례 제정 ⑤ 선결처분

4.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정승진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③ 선결처분 ④ 예산의 의결 및 결산의 승인

5.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지방7급(지방자치론)

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의 사항을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6 전직시험(8·9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②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③ 의회해산권 ④ 직원에 대한 임면권

답 1. ① 2. ① 3. ⑤ 4. ③ 5. ③ 6. ③

10 **다음 내용을 조직이론의 발전 과정에 따라 고전적 조직이론 ⇨ 신고전적 조직이론 ⇨ 현대적 조직이론의 순서로 배열한 것은?**

> ㉠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 ㉡ 인간의 감정적·정서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인다.
> ㉢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 ㉣ 상황이론과 자원의존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 ㉤ 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 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 호손실험연구 등을 포함한 인간관계학파가 대표적이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

해설

(고전적 조직론 : ㉢, ㉤) ⇨ (신고전적 조직론 : ㉡, ㉥) ⇨ (현대 조직론 ㉠, ㉣)
㉠ 개방체제관 ⇨ 현대조직론
㉡ 사회적 인간관 ⇨ 신고전적 조직론
㉢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 고전적 조직론
㉣ 상황이론과 자원의존이론 등 거시조직이론 ⇨ 개방체제관의 현대조직론
㉤ 행정의 체계화·합리화, 능률 향상 ⇨ 고전적 조직론
㉥ 인간관계론 ⇨ 신고전적 조직론

조직이론의 비교

구 분	고전적 조직론	신고전적 조직론	현대 조직론	
인간관	합리적·경제적 인간	사회적 인간	자아실현인	복잡인(복합인)
	욕구의 단일성(경제적 욕구) **인간의 피동성, 수동성** **동기부여의 외재성** (외재적 보상-경제적 유인)	**욕구의 단일성**(사회적 욕구) **인간의 피동성, 수동성** **동기부여의 외재성** (외재적 보상-사회적 유인)	**인간욕구의 다양성** **인간의 능동성** **동기부여의 내재성** (내재적 보상)	**인간욕구의 다양성** **인간욕구의 변이성·가변성** **⇨ 유형화·정형화 곤란** **욕구의 개인차**
	X이론(수직적 명령·복종 중시)	**Y이론**(인간 고려, 1930년대 인간관계론)	**Y이론**(성장이론, 후기인간관계론)	Z이론의 일종(상황적응이론)
조직 목표와 개인목표	양립·조화 가능 ⇨ **교환모형** (일 vs 경제적 유인 교환)	양립·조화 가능 ⇨ **교환모형** (일 vs 사회적 유인 교환)	조직목표·개인목표의 통합 **통합모형(교화모형·수용모형)**	상황에 따라 다른 **상황적응적 관리전략**
조직구조	**공식적 구조**, 관료제·계층제	**비공식적 구조**	공식·비공식조직, **동태적 구조(탈관료제)**	
환경관	**폐쇄**체제관	**주로 폐쇄**체제관(인간관계론) 또는 준개방체제관(생태론 등)	**개방**체제관	
행정변수	**구조**	**인간(행태)**	**환경**	
행정이념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다원적 목표·가치·이념**	
연구방법	원리접근(**형식적 과학성** 추구)	경험적 접근(**경험과학성 추구**)	복합적 구조(**경험과학성 제고**, 종합학문성·學諸性)	
정치·행정	**정치·행정2원론**	**정치·행정2원론**	**정치·행정1원론**	
기초이론	행정관리론, 과학적 관리론, 원리접근법, Weber의 관료제론	인간관계론, 초기 비교행정론·생태론, 환경유관론(Selznick)	상황적응론 등 거시조직론, 탈관료제론, 비교조직론(Hardy), 체제론(Scott), 의사결정론(Simon), 조직혁신론(Tompson)	

답 ⑤

[관련기출]

1. 다음 중 고전적 조직이론(classic organization theory)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5 국회9급
① 기계론적 조직관에 입각하고 있다.
② 공조직과 사조직의 관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공·사행정이원론에 입각하고 있다.
③ 공식적인 조직구조를 강조한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⑤ Taylor와 Gulick 등은 고전적 조직이론자들이다.

2. 고전적 조직이론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합한 것은? 2010 서울7급
① 조직은 생산과 관련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② 조직의 구성원들은 합리적인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③ 전문화와 분업을 통하여 조직의 효과적 운영과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
④ 조직이 합법적 규칙과 권위에 기초할 때 개인의 오류 제거가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⑤ 현대적 조직이론의 초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3. 고전적 조직론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3 경찰간부
① 연대적으로는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까지 나타난 조직이론들을 지칭한다.
② 여기에는 과학적 관리론, 지식 관리론, 관료제론 등이 해당한다.
③ 조직의 구조적 또는 기계적인 관점에 기초하였다.
④ 외부환경과의 관계보다는 조직 내부의 합리적 또는 능률적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

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가9급
①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②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③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④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5. 신고전적 인간관과 고전적 인간관의 공통점은? 2004 울산9급
① 인간행동의 피동성 ② 동기부여의 내재성 ③ 비공식적 조직 중시 ④ 경제적 요인의 중시 ⑤ 인간욕구의 다양성

6. 신고전 조직이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서울9급
① 사회적 능력과 사회적 규범에 의한 생산성 결정 ② 계층적 구조와 분업의 중시
③ 비경제적 요인과 비공식집단의 중시 ④ 의사소통과 참여의 중시

7. 신고전적 조직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9급
① 메이요(Mayo) 등에 의한 호손(Hawthorne)공장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② 공식조직에 있는 자생적, 비공식적 집단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③ 인간의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동기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춘다.
④ 조직이란 거래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고 본다.

답 1. ② 2. ② 3. ② 4. ③ 5. ① 6. ② 7. ④

11 **다음 리더십 유형 중 리더와 조직구성원의 관계를 점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수준으로 서로를 이끄는 상호관계로 접근하지 않는 것은?**

① 진성 리더십 ② 카리스마적 리더십 ③ 변혁적 리더십
④ 윤리적 리더십 ⑤ 서번트 리더십

해설

변혁적 리더십 (transformational leadership	거래적 리더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변동추구적·개혁적 리더십.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기존 사고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관과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답을 구하도록 유도하며 기꺼이 위험을 감내하고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변화를 선도함.
서번트리더십 (servant leadership)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앞에서 이끌어주고 봉사함으로써 구성원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헌신. 방향제시자, 의견조율자, 지원해 주는 조력자 등 세 가지 리더의 역할이 제시됨.
진성리더십 (authentic leadership)	• 리더와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자기개발 촉진 측면에서 자기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정보의 균형된 프로세스(처리) 및 관계적 투명성 등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하여 긍정적 심리 역량과 긍정적·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증진하는 리더의 행동양식 • 부하에 대한 적극적 영향과 변화를 강조하는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 달리 리더 개인의 신념, 가치 및 긍정적 역량을 중시하며, 조직구성원과의 밀접한 관계의 형성과 긍정적 모델링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행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구성요소 : 자기인식(self-awareness), 도덕성(ethical/moral), 투명성(transparency), 균형된 프로세스(balanced processing)
도덕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 (moral leadership)	① 지도자의 도덕성과 추종자의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도자는 스스로 지도자들의 지도자(leader of leaders)가 되고 추종자는 자기 지도자(self leader)가 되도록 이끄는 리더십. ② 리더가 조직목표에 부합되는 분명한 비전과 윤리·철학을 가지고 윤리적인 비전·가치에 준거하여 추종자들이 조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변화지향적 리더십.
카리스마적 리더십 (위광적 리더십) (charismatic leadership)	① 뛰어난 개인적 능력으로 부하에게 심대하고 막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영향으로 부하가 탁월한 업적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 카리스마 : 리더의 개인적 특성으로 간주하여 부하들이 리더를 지원하고 수용하도록 만드는 대인적 매력) ② 조직성과, 구성원의 만족 등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리더십 이론과 달리 부하의 마음속에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여 유지하도록 하고, 부하를 신뢰·존중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사명감을 강화하는 방법 등을 강조. ③ 카리스마적 리더의 특징 : ㉠ 현상유지(status quo)에 반대, 자신의 소신·이상을 확신, ㉡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가 강함, ㉢ 자신이 부하에게 기대와 신뢰를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부하의 자존심·자신감을 제고, ㉣ 언행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전하고 행동으로 본받도록 함, ㉤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음.

•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은 변혁적 리더십이며, 진성리더십, 서번트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배려·비전제시, 구성원의 자율성·창의성 중시라는 점에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연관성을 가진다.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부하로 하여금 리더를 극단적으로 존경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신뢰하게 하며 부하가 리더의 세계관에 따르도록 바랄 뿐이지만,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부하에게 확립된 의견뿐 아니라 리더가 확립시킨 의견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입키며, 자율적·자아실현적·이타적 부하가 되게 한다.
• 번스(J. Burns)는 리더와 부하의 역할을 연결시키면서 리더십은 부하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떠나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다.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을 '리더와 부하들이 서로를 보다 높은 도덕성과 동기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Bass(1985)는 Burns(1978)의 정치적 리더십 개념을 일반 조직에 적용하여 변혁적 리더십을 '부하들로 하여금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했다. 초기에는 변혁적 리더십을 구성하는 행동요소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자극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그 후 Bass & Avolio(1994)는 영감적 동기부여를 추가하여 4I's 차원을 포함하는 리더십으로 제시하였다.

• 카리스마적 리더십 vs 변혁적 리더십

구분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강조 내용	리더에 대한 추종자들의 개인적 일체화 강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
리더 행동	부하로 하여금 리더를 극단적으로 존경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신뢰하게 함	자율적·자아실현적·이타적 부하가 되게 함
적용 상황	비정상적인 육체적·감정적 노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나 전쟁 같은 위기상황에 적합	급변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창의력이 요구되거나 부하의 자발성과 책임성이 요구될 때 적합

답 ②

12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을 다양한 정치적 이해를 가진 당사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한다.
㉡ 만족모형은 제약조건 하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 혼합탐색모형을 주장한 Etzioni는 정책결정 설명모형의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 점증모형은 만족모형의 제한된 합리성과 미국 다원주의 사회의 정책적 제약까지 고려한 모형으로서 소폭의 변화만 대안으로 고려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현실적·실증적·귀납적 모형이다. 점증모형은 최선의 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에 대한 동의라고 보았다. 즉, 정책관련자의 보다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면 보다 훌륭한 정책(합리모형은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지배(dominance)가 아닌 타협(compromise)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가치의 상대주의와 민주주의적 이념을 전제로 하며, 합의를 통해 산출된 정책은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인다. 기존 정책은 다양한 정치세력 간 타협의 산물이므로, 정책결정자는 과거의 타협을 부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한 과거의 정책과 거의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여 계속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려 한다고 보았다.
㉡ (○) 만족모형은 인간의 인지능력 한계, 시간·비용·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합리모형이 가정하는 포괄적 합리성이 제약을 받아, 최적(optimum)의 대안보다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satisficing)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가정한다.
㉢ (×) 합리모형은 제제와 내용이 **너무 이상적·규범적**이어서 현실의 정책결정상황 설명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기술적·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고 정치적·사회적 합리성을 경시**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치적 조정(정치적 합리성)이 곤란하며, 공평성 등 다른 기준과 갈등이 유발될 경우 그 완화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 (×) 혼합탐색모형(Mixed Scanning Mode)은 정책결정의 규범적·이상적 접근법인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 접근법인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제시된 모형이지만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답 ①

[관련기출]

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회8급
① 만족모형은 정책담당자들이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서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는 견해이다.
② 혼합탐사 또는 혼합주사모형은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 결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과정은 초정책결정 단계, 정책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시간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Allison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는데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정치모형의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한다.

2. 정책결정모형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국회9급
① 점증모형은 타협과 조정의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②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에 근거한 실증적·연역적 접근법이다.
③ 합리모형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가치 극대화를 추구 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④ 엘리슨(Allison)모형은 정책결정모형을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⑤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쓰레기통모형을 의제설정과정에 적용한 모형이다.

3.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14 국회9급
①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② 점증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혼합모형은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절충을 시도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설명력이 높다.
⑤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강조하며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다.

4.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0 국가7급

①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절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우연히 이뤄진다고 보는 정책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을 체계론적 시각에서 파악하고 정책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결정모형이다.
④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특성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의 지나친 보수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5.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2 소방간부후보

① 합리모형은 분석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된다.
② 점증모형은 치열한 정치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므로 과거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③ 최적모형은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한다.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이다.
⑤ 만족모형은 행정인이 아닌 경제인의 가정에 기초하여 제한된 합리성을 추구한다.

6.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군무원

① 합리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둔다.
② 점증모형은 보수적 성격으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며 전년도 답습적 예산제도와 관련된다.
③ 최적모형은 정책결정 지침을 결정하는 데는 합리성을 중시하며 체제주의는 배제한다.
④ 만족모형은 한정된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을 모색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답 1. ④ 2. ② 3. ⑤ 4. ① 5. ⑤ 6. ③

13 규제개혁 전담기관, 대상, 전략 등을 체계화 한 「행정규제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참고 : 2021년 현재 21대 국회)

① 제15대 국회 ② 제16대 국회 ③ 제17대 국회 ④ 제18대 국회 ⑤ 제19대 국회

해설

21대 국회는 2020.5.~2024.5.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8.22. 제정(1998.3.1. 시행). 김영삼 정부, 15대 국회(1996.5~2000.5)에서 제정.

답 ①

14 <보기>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계획-사업-예산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하며, 주요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는 주어진 재원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지표에 포함한다.
㉣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 System)는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는 총체주의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 편성에 비용·노력의 과다한 투입을 요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1998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해설

㉠ (○) 성과주의예산은 계량화된 업무량에 단위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이 정해진다. 업무단위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며, 계량화된 정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과 관리 개선에 도움을 준다. 공공서비스의 추가 공급 필요시 표준화된 업무단위가 개발되어 있어 추가로 필요한 업무량과 예산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 계획예산은 목표(정책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안의 비교·평가, 투입·산출을 모두 고려한다.

특 성	품목별예산(LIBS)	성과주의예산(PBS)	계획예산(PPBS)
예산의 이념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예산의 기능	통제기능(예산을 품목과 연결)	관리기능(예산을 사업과 연결)	계획기능(예산과 계획을 연결)
정보의 초점	품목(투입)	기능·사업·활동(산출)	목표·정책(효과)
범 위	투입	투입·산출	투입·산출·효과·대안

㉢ (×) 품목별 예산은 무엇(what?)을 구매하는지 알 수 있지만, 왜(why?) 구매하는지 알 수 없음(투입과 산출의 연계 부족). 따라서 정부사업의 성격 파악과 사업성과 평가가 곤란함.
㉣ (○) 영기준 예산은 합리주의(총체주의)예산이지만, 의사결정단위 설정 및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어 업무부담을 가중시켰다(조지아 주 의사결정 패키지는 11,000개, 미국 국방부는 30만개에 달했음). 이로 인해 의회와 관료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중앙정부에 2007년 도입, 지방정부에 2008년 도입(사업예산제도).

답 ②

[관련기출]

1. 예산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7급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주요한 관심 대상은 사업의 목표이나, 투입과 산출에도 관심을 둔다.
③ 목표관리 예산제도(MBO)의 도입 취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향하는데 있다.
④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에서는 국민과 의회가 정부의 사업 내용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편리하다.

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회8급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② 계획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 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④ 성과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 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
⑤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3. 다음은 여러 예산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2010 지방9급
①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개발되었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다.
④ 품목별예산제도는 지출항목을 엄격히 분류하므로 사업성과와 정부생산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1 국회9급
① 품목별예산제도에서는 지출항목을 너무 엄격하게 분류하여 전반적인 정부 기능 혹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성과주의 예산서에는 전형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고 성취될 업무량에 대한 측정, 업무가 완료될 경우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이 포함된다.
③ 자본예산제도에서는 정부지출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적 세입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④ 계획예산제도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의회의 지지를 받았다.
⑤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계획예산제도와는 달리 영기준 예산제도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

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 경정승진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책임 확보와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조과잉이나 번문욕례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증진하여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③ 장기적인 안목으로 비용편익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는 지나친 집권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을 강조하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 경정승진
① 품목별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며, 이익집단의 저항회피라는 정치적 이점이 있다.
②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으며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목표·계획·사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과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④ 영기준예산제도는 신속한 예산조정 등 변동 대응성, 유연성, 신축성을 향상시켜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점증주의를 극복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7. 영기준예산(ZBB : Zero Base Budgeting)과 일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11 경정승진
① 일몰법은 입법적 과정으로 개혁추진기관이 기관이나 사업의 존립 필요성을 입증한다.
② 영기준예산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배분이 가능하여 우선순위 결정이 용이하다.
③ 일몰법은 감축관리의 실행에 활용되며 영기준예산과 달리 예산에만 적용된다.
④ 영기준예산은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고 소규모 조직이 희생당할 가능성이 높다.

답 1. ③ 2. ④ 3. ④ 4. ④ 5. ② 6. ④ 7. ④

15 <보기>의 공익에 대한 설명들을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으로 적절 하게 묶은 것은?

㉠ 공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행정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 공익은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타협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결과이다. ㉢ 공익의 실체는 도덕적 절대가치이다. ㉣ 민주적 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 ㉤ 공익은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이다.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해설

- **공익과정설** : ㉠, ㉡, ㉣ 공익은 실체적 내용이 선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익 간 경쟁·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봄. 다양한 이해관계가 조정·타협을 통해 공익이 되는 점에서 다원화된 사회의 특성을 반영. 공익의 유일성·선험성 부정, 공익관념은 다수성·복수성과 가변성을 지님.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임. 공익은 제도나 절차·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사회집단 간 타협·협상·투쟁을 통해 내용이 변형됨. 공익은 상호경쟁적·대립적인 이익이 조정과 균형된 결과임.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며 적법절차를 강조.
- **공익실체설** : ㉢, ㉤ 공익을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先驗的)·실체적·규범적·도덕적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동체를 개인에 우선시키는 견해. 사회나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개인의 속성과 다르고 개인의 단순한 집합과 다른 실체가 있으므로, 공익도 사익과 별도로 공공선(common good)으로서 규범적으로 존재한다고 봄. 공익을 전체효용의 극대화, 도덕적 절대가치, 공유하는 이익으로 이해.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은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비교

학설	실체설·규범설·적극설	과정설·소극설
공익개념	**선험적(先驗的) 개념. 일원적·실체적·적극적 개념** 전체효용극대화, 절대가치, 공유의 이익, 보편성	**경험적(經驗的) 개념. 다원적·과정적·소극적 개념.** 다수 이익 간 조정·타협의 산물, 적법절차의 준수
공익과 사익	**공익은 사익과 본질적·질적 차이가 있음** **사익을 초월한 공익의 존재(Σ사익 ≠ 공익)** -사익은 공익으로 전환 불가 -정의, 도덕, 양심, 일반의사 등 실체적·도덕적 개념	**공익은 사익과 상대적·양적 차이만 있음** **사익이 고려되지 않는 공익은 없음** -사익을 공익으로 전환 가능. 공익개념의 가변성. -공익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 간 타협·조정의 결과
	공익과 사익을 명확하게 구분 사익보다 공익이 중요, 공익과 사익 간 **갈등 없음**	공익과 사익의 명확한 구분 곤란 공익과 사익은 **갈등관계에 있음**
사회체제	투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개도국	다원화된 선진국
사상	**전체주의·집단주의(참여 무시)**	**현실주의, 개인주의(참여 중시), 다원주의**
공익 결정자	행정인(소수 엘리트)의 **적극적 역할** 국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의 목민적(牧民的) 역할	행정인은 **소극적 역할**만 담당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행정의 조정자 역할
이념	능률성·전문성 강조	민주성 강조
정책과정	국방·외교정책과 관련	교육·복지정책과 관련
	국가주의(statism), 정책결정의 **합리모형·엘리트론**	정책결정의 **점증모형·다원주의**

답 ④

[관련기출]

1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9 서울7급(2)

㉠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 선의 가치가 있다.
㉡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
㉢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 행정의 조정자 역할이 강조된다.

① ㉠ ② ㉡ ③ ㉠, ㉢ ④ ㉡, ㉣

2.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2022 지방9급

㉠ 실체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것이다.
㉡ 과정설에 의하면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이다.
㉢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도움을 준다.
㉣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모두 공익 실체설을 주장하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3.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행정사

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②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③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④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의 결과물이다.
⑤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4. 공익의 과정설(소극적 인식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7급(2회)

① 공익을 사익이 적절히 조정·절충된 결과로 본다.
②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각 사회집단의 이익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공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④ 토의나 비판과정이 발달하지 못한 신생국가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5.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9급(상)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6.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 경정승진

①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주의의 관점을 취하는 반면, 공익의 과정설은 다원주의의 관점을 취한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③ 공익의 과정설은 정부와 공무원의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중시한다.
④ 플라톤(Platon)과 루소(Rousseau)는 공익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답 1. ③ 2. ③ 3. ① 4. ② 5. ③ 6. ②

16 <보기>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평정자의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정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 협의를 통해 목표를 정하는 등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평정하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다.
㉢ 평정자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 중 피평정자에게 해당하는 사실 표지 항목을 골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	㉢
①	목표관리제 평정법	주기적 검사법	체크리스트법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산출기록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산출기록법
④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체크리스트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목표관리제 평정법	체크리스트법

해설

㉠ 도표식, ㉡ 목표관리식(MBO식), ㉢ 체크리스트법(사실표지법, Probst번)

답 ⑤

근무성적평정방식(위 문제 지문에 언급된 방식만)

도표식 평정척도법 (Graphic Rating Scale)

① **의의** : 한 쪽에 평정요소를, 다른 쪽에는 각 평정요소별 우열척도인 등급을 표시한 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자가 피평정자를 **평정요소별로 관찰하여 해당 평정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

사례

평정요소	평정요소의 내용	요소별 배점	평정등급(평정척도)	소계 점수
기획력	창의적 시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9	① - ② - ③ - ④ - ⑤	
추진력	맡은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	6	① - ② - ③ - ④ - ⑤	

② **장점** : 평가자의 직관과 선험을 바탕으로 하여 평가요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성이 빠르고 쉬우며 경제적임. 상벌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평정결과가 점수로 표시되므로 **계량화와 통계적 조정 용이.**

③ **단점** :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 곤란**, 등급지정 기준이 모호해 평정이 주관적·임의적임(**등급의 비교기준 불명확**), **연쇄효과와 집중화·관대화 경향**, 일반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피평정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 형성 곤란.

✔ 도표식평정의 집중화·관대화 효과를 막기 위해 강제선택법이 활용된다.(x) - 연쇄효과를 줄이기 위해 강제선택법을, 집중화·관대화를 줄이기 위해 강제배분법을 사용

체크리스트(Checklist)법(사실표지법), 프로브스트(Probst)법

① **의의** : 공무원을 평가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하고, 평정요소의 설명에 대해 피평정자의 특성에 해당하는지 가부(Yes, No)를 표시하는 방법.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며 가중치를 두어 환산할 수도 있는 계량적 방법.

사례

행 태	체크란	가중치
근무시간을 잘 지킨다.	yes	5.4
업무가 많을 때 기꺼이 야근을 한다.	no	3.5
책상 위 문서가 항상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	yes	1.7

*가중치는 실제 평정서에 표시되지 않음.

② **장점** : 평정요소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한 질문항목마다 유무(有無)나 가부(可否)만을 판단하므로 평정 용이. 연쇄효과 감소.

③ **단점** : 평정요소의 평정항목 작성 곤란, 질문항목이 많으면 평정 곤란, 직무성격에 따라 평정항목이 다를 수 있어 부서 내 전체적 평가 곤란. 동일 항목에 대해 차별을 두지 못함(예 일을 열심히 한다고 체크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 차별을 두지 못함).

사실기록법

① **의의** :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 객관적이지만,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의 측정이 곤란한 업무에 적용 곤란.

② **종류**

㉠ **주기적[정기적] 검사법** : 직무수행의 능률에 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적을 평가.
㉡ **산출기록법** : 공무원의 생산기록을 통해 평가. 일상적 반복적이며 측정이 용이한 단순 업무에 적용.
㉢ **근무태도기록법**
㉣ **가감점수법** : 직무수행태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관찰되면 감점, 바람직한 행동이 관찰되면 가점.

목표관리제 (MBO식) 평정법

① **의의** : 상관과 부하가 합의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진척상황을 정기적인 면담 등을 통해 검토하여 진행시켜 나간 다음 목표 달성 여부를 근거로 평가하는 제도(결과를 중시) * 종래 국가공무원 일반직 4급 이상에 적용했었음

② **장점** : 시간적 오류 방지, 직무관련성 높음, 직무개발과 인재육성 용이, 성과 향상에 효과적임.

③ **단점** : 목표가 평정대상자의 능력을 고려해 개별 구성원 중심으로 설정되므로 개인 간 비교를 위한 평정에 사용할 수 없음.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므로 제도의 개발·운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름. 피평정자가 성과 달성에 별다른 통제력(기여도)이 없는 경우 적용 곤란.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BARS ; 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

① **의의** : **도표식 평정척도법 + 중요사건기록법**.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평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행태(중요 사건)를 서술적 문장으로 평정척도를 표시한 평정도표(행태적 길잡이)를 사용.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job)와 관련한 중요한 과업(task) 분야를 선정하고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중요 행태는 중요사건기록법에서 idea를 얻을 수 있음).

■ 사례－평정요소 :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성(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난에 체크 표시)

등급	행태 유형
(　) 6	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　) 5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 4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 가끔 잘못된 문제를 초래한다.
(　) 3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　) 2	부하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　) 1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

② **장점** : 평정척도는 피평정자(직무수행담당자)와 계선상의 관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계하므로 신뢰와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 주관적 평가의 오류 가능성 최소화.

③ **단점** : 동일 직무라도 과업마다 별도의 행태기준을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어느 하나의 행태만 선택하라는 것은 인간행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하므로 설득력이 약함(인간은 바람직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를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임).

행태관찰 척도법 (BOS ;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

① **의의**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 행태기준평정척도법 처럼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한 구체적 사건·사례를 기준으로 평정하지만, 등급은 도표식평정척도법과 유사하게 **사건의 관찰 빈도 수를 표시하는 척도를 구성**하여 조직구성원의 주요 행태별 척도를 제시한 뒤, 해당 척도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

■ 사례－평정요소 : 부하직원과의 의사소통

평정항목	등급(관찰빈도) 거의 관찰 못함				매우 자주 관찰
새 정책이나 내규가 시행될 때 게시판에 게시한다.	1	2	3	4	5
주의력을 집중하여 대화에 임한다.	1	2	3	4	5
지시사항을 전할 때에는 구두로 한 것을 다시 메모로 전달함으로써 확인한다.	1	2	3	4	5
메모는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적는다.	1	2	3	4	5
상부 지시사항을 즉시 전하지 않고 며칠 지나 전함으로써 일을 서두르게 만든다.	1	2	3	4	5

㉡ **행태기준평정척도법의 단점인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 상호배타성 극복을 위해, 행태별 척도 제시.**

㉢ 선정된 평정항목은 모두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함(직무에 능통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게 되며, 시험의 내용타당성 확보와 유사한 논리).

② **장점** : **평정요소와 직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평정결과를 통해 평정대상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환류**시켜 줌. 도표식평정의 평정요소의 추상성을 해소하고 등급 간 막연한 탁월·우수·보통 등의 평가가 아니라 평정항목의 행동이 **얼마나 자주 관찰되느냐를 기준으로 하므로 평정자의 주관성·임의성을 줄임.**

③ **단점** : 행태의 정확한 관찰이 곤란하므로 도표식의 **등급 간 구분의 모호성과 연쇄효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관련기출]

1.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020 지방7급

㉠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 시간 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	㉡	㉢
①	강제배분법	산출기록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②	강제선택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기준평정척도법
③	강제선택법	산출기록법	행태관찰척도법
④	강제배분법	주기적 검사법	행태관찰척도법

2.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5 지방7급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는 연쇄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② 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③ 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3.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8 선관위9급

>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한다.
>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 각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

4.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9 경북 소방직

> ○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 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 ○ 평정요소별 행태에 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건,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평정한다.
> ○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 피평정자에게 행태변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평정의 주관성과 임의성을 줄일 수 있다.

① 행태기준척도법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③ 행태관찰척도법 ④ 체크리스트법

5.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 경정승진

① '중요사건 기록법'은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들을 평정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단점이 있다.
②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평정이 용이하고 등급의 비교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
③ '행태관찰척도법'은 직무성과와 관련이 있는 중요행위를 사전에 나열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에 대한 빈도를 표시하는 척도를 만들어 평가한다.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혼란을 갖게 된다.

6. 근무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2 지방7급

① 행태관찰척도법은 도표식 평정척도법이 갖는 등급과 등급 간의 모호한 구분과 연쇄효과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
② 중요사건기록법은 평정자인 감독자와 피평정자인 부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피평정자의 태도와 직무수행을 개선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③ 강제배분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된다.

답 1. ① 2. ④ 3. ① 4. ③ 5. ② 6. ②

17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에서 주민직접청구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사청구 ② 주민소환 ③ 주민투표 ④ 주민소송 ⑤ 주민청원

해설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없음. 모두 다 주민의 직접청구가 가능함. 다만, 출제 당시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청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칠 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서 ③을 정답으로 한 것으로 보임. ①②④⑤의 경우 청구가 있으면 어떤 행위를 할 의무가 부여됨(감사의 실시, 소환투표의 실시, 법원의 판결, 청원수리기관의 응답 또는 처리 의무 등). 그러나 2022.4.26.부터는 법정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이 주민투표 청구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므로 현재 시점(2022.7.)으로 보면 답이 없음.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주민참정 방식의 분류가 있으므로 참조 바람.

주민의 참정방식-직접참정과 간접참정

지방자치는 지역 내 공공사무를 주민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므로 직접참정방식이 이상적이지만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자치사무의 전문성 등으로 인해 간접참정방식[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참정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

간접참정	① 대표자를 선출해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 예 **주민선거** ② 장·단점 :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대표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주민은 선거시점에서만 자기의사를 표시함에 그치고 대표자 선출 후 주민의사가 대표자 의사에 종속되며 대리인 문제를 초래.
직접참정	① 주민이 직접 지방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 예 **주민청구제(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주민조례발안], 주민소송), 주민투표제(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② 장점 : 주민참정 기회 확대로 주민의 주민자치 수준이 향상되고 대의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대리인 문제 해결) 주민이 지방자치의 궁극적 주체임을 현실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 ③ 단점 : 이해관계 등의 부당한 압력수단으로 악용, 번잡한 절차로 인한 낭비, 지역분열 초래.

• **주민참정방식** ┬ **간접참정방식** : 주민선거
　　└ **직접참정방식** ┬ **주민청구제** :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주민조례발안], 주민소송
　　└ **주민투표제** :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 주민청구제는 주민이 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지는 않음.
　ⓐ 주민감사청구시 주무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감사 실시
　ⓑ 주민조례발안시 조례 제정·개정·폐지는 지방의회가 의결.
　ⓒ 주민소송시 지방재정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 판단은 관할 법원이 함(1심은 관할 행정법원).
㉡ 주민투표제는 주민이 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짐
　ⓐ 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또는 지방의회나 주민이 법정요건을 갖춘 청구시 실시(지방의회나 주민이 청구시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 사안에 대한 결정은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
　ⓑ 주민소환투표 : 주민이 법정요권을 갖춰 청구시 실시. 소환여부 결정은 주민소환투표 결과로 확정.

답 ③

18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② 문화재 복원사업
③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④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 사업
⑤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해설

④(○)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규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몰랐어도 대상인 사업을 알고 있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었음)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②③⑤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이하 각호 생략)

답 ④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과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국가재정법 시행령 21조 제1항)	
신규 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 건설사업(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지능정보화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성에 2년 이상 소요 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단 건축사업 제외. ㉡ 지능정보화 사업 ㉢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사업

구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건축사업 / 연구개발사업	신규사업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	완성에 2년 이상 소요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신규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이상	완성에 2년 이상 소요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

[관련기출]

1.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회8급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②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③ 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④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7 서울9급

①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②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③ 토목사업은 400억 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관리 대상이다.
④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답 1. ② 2. ②

19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또는 결산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 쓰는 금액(지출) 증가(각 항 금액 증액, 새비목 설치)시키려면 정부 동의 필요. 각 항 금액 감액이나 비목(費目) 폐지는 정부 동의 필요 없음.
•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② (○) •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들음. 결산에 대한 시정연설은 없음.
•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대통령의 시정연설** :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9월 초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예산편성배경, 예산·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회에 대하여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정연설을 함(보통 국무총리가 대독). 대통령 시정연설은 추상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결산안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을 하지 않음.

④ (○) • **국회법 제84조의3(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 ·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 ③

[관련기출]

1. 다음 중 예산심의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17 국회8급

㉠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한을 1년으로 한다.
㉤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한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3 국가7급

① 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③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 지방7급

①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국회의장이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예산안과 결산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회부된 기금운용계획안도 심사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가9급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③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답 1. ④ 2. ④ 3. ④ 4. ②

20 다음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격차로 인한 시장실패를 예방하는 정부 개입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레몬법이 있다.
② 윌슨(J. Q. Wilson)은 규제로 인한 비용은 분산되고 규제의 편익이 집중되는 상황을 이익집단정치로 정의하였다.
③ 정부실패 원인 중 파생적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의 신설·강화규제심사 시 활용되고 있다.
⑤ 네거티브 규제는 기본적으로 행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규제방식이다.

해설

① (○)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등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한다.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역선택). 차량 레몬법의 경우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되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레몬마켓과 피치마켓>

- **피치(복숭아)마켓** : 달콤하고 맛있는 복숭아에 비유. 가격에 비해서 고품질의 상품이나 우량인 재화·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이 적으며 판매자들의 품질 경쟁이 높기 때문에 가격 대비 질 좋은 상품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레몬마켓** : 시고 맛없는 레몬에 비유. 상품이나 재화, 서비스의 품질을 구매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량품들이 많이 유통되는 시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품질의 상품들이 가득하고,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소비자들은 불량품이나 낮은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역선택 문제). 판매자는 상품의 품질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까지 상품의 품질 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레몬마켓은 때로는 개살구 시장이라고도 불린다. 구매자들은 상품의 품질이 좋은 것을 싸게 사기 위해 찾아 다니지만 판매자들은 질 좋은 상품을 싸게 팔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품질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역선택의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중고차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중고차의 정보가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차를 파는 사람이 정보의 우위에 있게 되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00년형 중고 소나타 시장을 고려해보자. 시장에서는 2000년형 소나타는 거의 같은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고차 시장 가격보다 좋은 품질의 차라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그 시장에 자신의 차를 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의 품질 혹은 가치가 시장의 가격보다 낮다면 차를 팔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차들은 실제로 2000년형 소나타의 평균 가치보다 낮은 저품질 제품들이 주로 남게 되는 레몬마켓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② (×) 이익집단정치 ⇨ 고객의 정치

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감지된 규제의 편익(수혜자집단)	
		높은 수준으로 집중(특정 소수)	낮은 수준으로 분산(불특정 다수)
감지된 규제의 비용(비용부담집단)	높은 수준으로 집중(특정 소수)	**이익집단정치(interest - group politics)** 예 의·약분업, 한·약규제, 노사관계규제, 중소기업고유업종규제	**기업가적 정치(entrepreneurial politics ; 운동가의 정치)** 예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유해성 물품에 대한 위생규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낮은 수준으로 분산(불특정 다수)	**고객의 정치(client politics)** 예 진입규제(의사·변호사 등 직업면허, 인·허가제도), 농산물 최저가격규제, 수입규제	**대중정치(majoritarian politics ; 다수의 정치)** 예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낙태·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신문·방송·출판물 등 언론에 대한 윤리규제, 사회보장법, 음란물 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등

③ (×)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정부대응은 정부보조 삭감이나 규제완화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식(안 되는 것은 암기 : ㉳이보㉢ ㉲㉥ 태㉠㉯이 : 사-보규/파-민/권-보)**

구 분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완화
사적 목표 설정(행정조직의 내부성)	○(관료이익 추구 제거)	×	×
X-비효율, 비용체증(비용≠수익)	○(민간기업은 효율성 확보)	○(비효율적 보조금 삭각)	○(규제에 따른 비용 감소)
파생적 외부효과	×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규제로 인한 부작용 방지)
권력의 편재	○(독점적 권력에 따른 특혜 방지)	×	○(규제를 통한 특혜제공 방지)

④ (×)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시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정부입법(행정부가 발의한 법률)에만 이뤄지고, 의원입법(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에 의한 의안 검토, 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등 다양한 의안 검토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들은 규제영향분석만큼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미비는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적 부담과 같은 민간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명시되지 못함으로 인해 국회의원 및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심의시 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며, 해당 법률안이 타당한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더구나, 최근 의원입법이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흠결은 경제사회에 심각한 비용과 부담을 야기하는 품질 낮은 규제안이 사전에 체계적 검토 없이 정치적 고려만을 토대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⑤ (×) 네거티브 규제 ⇨ 포지티브 규제

■ **규제의 개입 범위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구분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네거티브(negative) 규제
특징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사전규제** 예 주로 허가제·인가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사후규제** 예 주로 신고제·등록제
법 규정 형식	**~할 수 있다. ~이다.-허용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허용, 나머지는 금지)	**~할 수 없다. ~가 아니다.-금지 사항 명시** (특정 행위만 금지, 나머지는 허용)
입증책임	**피규제자가 규제법규 준수를 입증**	**규제기관이 규제법규 위반을 입증**
효과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제약됨**	**피규제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보장됨**

답 ①

[관련기출]

1.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지방7급

① 종합편성 채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이를 확보한 방송사에 대한 규제는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의 보호적 규제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는 포지티브 규제(positive regulation)보다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피규제자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③ 우리나라는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경제적 규제는 고객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규제는 기업가정치의 상황으로 분류된다.

2. 정부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5 지방7급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 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다음 중 정부규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15 서울7급

① 정부규제를 수단규제와 성과규제로 구분할 경우, 수단규제는 성과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② 정부규제를 수행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③ 정부규제를 포지티브(positive) 규제와 네거티브(negative)규제로 구분할 경우,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에 비해 규제대상기관의 자율성이 크다.
④ 규제개혁은 규제관리 ⇨ 규제품질관리 ⇨ 규제완화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 지방9급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구분하고 있다.
② 경제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배제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③ 포지티브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보다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④ 자율규제는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5.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 국회8급

① 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② 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③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④ 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⑤ 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답 1. ① 2. ② 3. ② 4. ③ 5. ①